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와 한미 정상회담

2015-16
OCT. 06, 2015

아산정책연구원

천영우 | 고문

최 강 | 수석연구위원

James Kim | 연구위원

안성규 | 전문위원

아래 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과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그리고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은 이 과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진의 대답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답에는 천영우 고문, 최강 수석연구위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 안성규 전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열병식 참석 이후 박 대통령의 중국행이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한국과 중국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했는지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데다 한국만 중국으로 더 다가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거둔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열병식 참석, 중국 경사론 이미지를 강화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합의, 한중 간 심도 있는 통일 논의의 시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욱 중시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진영을 넘

어서는 외교를 하는 계기가 됐고 동북아 지역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주장과는 달리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정상회담 성과에 비해 열병식 참석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그리 많지 않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이 특별히 대우했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열병식 참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이번 박 대통령 방중의 의의는 90%가 열병식 참석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으로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열병식의 본질은 옵티스(시각적 측면)와 컴퍼니(참석자)다. 열병식 참석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아무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미국이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옵티스가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서방 언론들은 열병식 광경을 집중 보도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와 어울려 서 있는지가 상징과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번 열병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러시아가 중심이 돼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의 주역들 사이에, 무대 중앙을 독재자들이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진영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무대에 섰다.² 한마디로 열병식 사진은 우방 또는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이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옵티스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한미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³

미국이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공을 들인 이유를 잘 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막고 한국을 중국 쪽으로 더 끌어들이려 애를 썼다. 미국은 부정적 발언이 공개될 경우 한국 내에서 일어날 파장을 우려했고, 한미를 이간질하는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발언을 삼간 것일 뿐 이를 미국의 진심으로 볼 수 없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만은 워싱턴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 6월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공세적

이고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한국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견국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자 워싱턴이 한국에 대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⁴ ‘한국에 불만이 없다’고 하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열병식에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총리나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케리 국무장관(John Kerry)이 함께 갔다면 옅틱스와 컴퍼니의 문제는 사라졌을 것이다. 한일 관계가 가장 나쁘고,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한미동맹의 성숙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과 중국이 평화통일 논의 개시에 합의하고 최룡해를 무대 구석으로 몰아놓는 광경이 북한에 압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원수도 정부 수반도 아닌 당 서기 최룡해는 서열상 무대 중앙에 올 수가 없으므로 그렇게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무대 중앙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보냈다. 김정은은 열병식에 참석했다가 핵 포기 압박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가겠다는 선택을 한 거다. 김정은이 중국을 보이콧한 것이지 중국이 김정은을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너무 부각

북한과 관련된 실제적 성과를 따져보면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의 역할만 너무 부각됐고, 한반도의 주도권이 중국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면이 있다. 우리가 부탁을 할 수록 중국은 생색내고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중국은 공휴일이라도 특사를 보내왔다. 그런 일이 생기면 가장 답답한 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철없이 굴더라도 참아달라면서 우리 쪽에 특사를 보낸다. 이럴 때 우리는 참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절대 수궁해선 안 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말린다.

한중 통일 논의 시작은 성과인가

정부는 중국과 통일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을 성과로 본다. 핵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 간 통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평가는 금물이다. 정상 간 통일 논의는 지난 정부에도 있었다.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중 간 공식적 통일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 공식 석상에서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는 중국이 할 역할이 없다. 남북이 합의하면 중국은 통일을 막을 명분이 없다. 독일은 4개국 공동 점령국이었기 때문에 2+4 회의를 통해 통일독일의 지위와 국경선을 합의해야 했다. 주권 국가인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도와준다고 되고 방해한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다. 중국의 협조와 지지 혹은 방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방식은 무력통일뿐이다. 무력통일로 북한이 무너질 때 남한이 북에서 어떤 군사작전을 펼칠 것이고 한중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선은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트랙 1.5도 아니고 트랙 1.0에서 중국이 통일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2+2 대화, 국책연구기관 대화, 정당 간 대화를 언급했다. 실제론 정부 간 대화인 한 개 채널을 더 뚫었을 뿐이며 깊이 않은 원칙론만 얘기될 것이다. 따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할 일은 아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청와대는 중국도 끌어올 수 있고 미국도 설득할 수 있다는 외교적 자신감이 붙은 듯하다. 나아가 동북아 신질서가 태동한다는 주장도 한다.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으나, 국익 차원에서 한국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한국의 외교 현안을 풀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면 신질서 구축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한국의 신질서 구축 노력이 현실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삐걱거렸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면서 한국은 3국 모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컨비닝 파워(Convening Power)를 갖게 됐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역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될 뿐 동북아 지역 전체에 걸쳐 새로운 안보 구도나 질서를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강한 전략적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로 얽혀 있다. 이런 갈등과 불신은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며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현안들이다. 이런 개별 사안들이 미일 vs. 중국이라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간다. 한국이 이런 흐름을 해결하고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도한 기대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에 대한 가치 판단이 디플레이션 되고 중국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그런 단면이 자주 드러난다.

그러므로 신질서보다 새로운 전략 공간을 마련하는 노력 정도로 수위를 낮춰 외교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과도해지면 외교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에 뿌리박은 전략적 구상이 돼야 한다.

신질서에 대한 청와대의 큰 의미부여가 국민 정서에 기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안보 이슈를 국민 정서에 기반하게 되면 외형상 잘한 듯 보여도 안보 국익 관점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혼란 야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일이라고 말했다.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중국과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이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따른다. 우선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고 통일로 갈 것이며 그 결과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북한 붕괴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핵을 가진 북한과의 오랜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간 북한과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하고 통일을 이루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해석은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 비핵화의 결과가 아니며 통일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공존체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돼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출구론’이 아닌 ‘입구론’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외부의 압박과 위협 때문이라는 논리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어느 쪽이든 박 대통령의 발언은 통일 이전 단계에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다. 통일에 너무 무게를 두다 보니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통일 논의가 핵 문제를 간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했던 말과도 배치되는 인상을 준다. 비핵화와 통일 논의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정책적 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며, 관련국들과도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은 자주적 평화통일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로 공식적인 대화를 한다 해도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 비핵화 6자회담은 한중 간에 자주 나오는 화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지겠지만 정부 간 대화에서는 빈번하게 거론되는 주제다. 중국이 정말로 북한 비핵화에 레버리지를 사용할지는 북한 위성 발사 시에 판명될 것이다.

이전까지 중국은 입으로는 비핵화를 말해도 실제로는 북한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했다. 안보리 제재가 채택돼도 중국은 이전보다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해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더 볼 수 있게 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비핵화 하지 않아도 중국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막는 중국의 이런 태도가 앞으로 실제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자고 할 때 중국이 선뜻 동의하는지를 봐야 이번 한중 정상회담 협의의 진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 주제다. 첫째,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기본 성격과 방향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게 험악해진 미국을 빨리 달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이들 이슈에 우리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 할 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려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보다도 한국인의 눈에 미국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신경

쓴다. 중국에 관한 오해는 한일 정상회담 날짜를 한중일 정상회담 이전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다.

또 이 정부가 남북 관계를 핵 문제와 별도로 가져가려 한다는 이미지를 자꾸 주면 미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면서 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는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더 시급하게 고민하고 미국과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미의 논의에는 모호한 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같은 추상적인 주제만 말해왔다. 그보다 역지가 실패할 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첨단 무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 사드 배치 일정과 책임 문제 등에 합의해야 한다. 중국에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중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하면 안 된다고 말만 하고 실제 도발은 못 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기회다.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미동맹을 강화할 몇 가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중국이 억제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미국과 사드의 첨단정밀요격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 회의론도 불식시켜 줄 것이다.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한미는 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인되고 몇 시간 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할 것인지를 합의해 내야 한다. 사드 배치 방침은 정상회담 직후보다는 북한의 위성 발사 후에 공식 발표하는 편이 더 낫다.

지금은 외교적 입지와 전략적 공간이 확보됐다고 자화자찬할 국면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고민할 때다.

1.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문화일보에 낸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 외교 지형의 격변 속에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 확대와 전략적 로드맵 전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업그레이드 된’ 한중 관계와 더불어 10월 한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국의 동북아 외교는 다양한 형식을 빌어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별도로 진행된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장관은 “북한이 병진노선을 되풀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중 양국 지도자가 병진노선 반대와 북핵 불용의 입장을 밝히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한 것은 중국이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윤병세, “한국 外交의 ‘전략적 공간’ 넓어졌다”, <문화일보>, 2015년 9월 8일자, 그리고 “[인터뷰] 윤병세 장관 “한반도의 평화통일문제가 한중 지도자 간에 자연스럽게 시작돼 점점 비중 있게, 또 허심탄회하게 논의 되고 있다””,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5년 9월 8일자 참조.
2. 천영우,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 과대평가 돼 있다”, <동아일보> 2015년 9월 18일자. URL: <http://news.donga.com/3/all/20150918/73700033/1>.
3. 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개 비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관해 한국이 중국의 외교적인 수에 말려드는 것을 우려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예외적인 사례로 Park Strategies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셴 킹이 박 대통령의 방중과 열병식 참석이 ‘유감스럽다(unfortunate)’고 평한 바 있다. Kang Seung-woo, “Park’s parade attendance seen not offending US”, *The Korea Times*, 2015년 8월 27일자. URL: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08/116_185680.html.
4. “U.S. calls for S. Korea to speak out against China’s behavior in South China Sea,” *The Korea Times*, 2015년 6월 4일자. URL: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5/06/116_180201.html 참조. 일본 언론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 또는 전직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포섭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오바마 정부가 주시하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iroyuki Akita, “US jittery over South Korea’s tilt toward China”, *Nikkei Asian Review*, 2014년 4월 24일자. URL: <http://asia.nikkei.com/magazine/20140424-A-future-in-drought/Politics-Economy/US-jittery-over-South-Korea-s-tilt-toward-China>.



천영우 전(前)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2014년 1월부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으로 있으며, 2013년 6월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을 설립하여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 2년 반 동안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하였으며(2010.10~2013.2) 그 이전 약33년간 직업외교관으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제2차관(2009~2010),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회담 수석대표(2006~2008), 외교정책실장(2005~2006)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재외공관 보직으로는 주(駐)영국 대사(2008~2009), 주(駐)유엔한국대표부 대사(차석)(2003~2005) 등을 역임하였다. 부산대학교에서 불어를 전공하고(1977), 미국 Columbia University에서 국제학 석사(MIA)를 취득하였다(1994).



최강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이자 외교안보센터장이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외교원에서 기획부장과 외교안보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동 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주연구부장을 지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 한국위원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국제군축연구실장,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방현안팀장 및 한국국방연구 저널 편집장 등 여러 직책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기획부 부장으로서 국가안보정책 실무를 다루었으며, 4자회담 당시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군비통제, 위기관리, 북한군사, 다자안보협력, 핵확산방지, 한미동맹 그리고 남북관계 등이다.



J. James Kim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미국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2012)와 랜드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안성규 주간은 아산정책연구원 편집실의 편집주간이다. 중앙일보에서 30년 가까이 정치부·국제부 등에서 취재를 했으며 통일·외교팀 팀장, 중앙일보 일요판 신문인 중앙SUNDAY의 외교·안보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냈고 이후 독립국가연합(CIS)의 순회 특파원도 했다. 기자 경력 초기에 북한의 국가 형성 과정을 집중 취재한 기획 시리즈에 동참했다. 그 시리즈는 학계의 북한 연구에도 크게 기여했으며 그 취재 내용을 담아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1992, 중앙일보)을 공저로 출판했다.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을 인터뷰한 유일한 한국 기자다. 2014년 5월 중앙일보를 정년 퇴직한 뒤 아산정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ISBN 979-11-5570-125-6
ISBN 978-89-97046-06-5(세트)

WWW.ASANINST.ORG